

중국의 한반도정책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탈냉전시기 중심으로

李桂蘭*

〈목 차〉

- I. 서 론
- II. 중국의 한반도정책 결정의 이론적 접근
- III.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
 - 1.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 기구
 - 2.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 과정
- IV. 한반도정책 결정과정 및 특징
 - 1. 과정
 - 2. 특징
- V. 결 론

I. 서 론

1978년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한 중국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적 규모로 경제가 혼미한 반면, 중국의 역할과 부상은 명실상부하게 기정사실화 되었으며 중국은 20세기 후반 이래 가장 역동적인 국가로서 미국을 비롯한 여타 강대국과 함께 동북아시아 분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의 외교정책의 조정은 동북아시아 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반도는 더욱 예외가 될 수

* 延邊大學 人文學院 國際政治專業 副教授

없다. 중국은 냉전시대부터 북한과 특수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또 그것으로 한미동맹을 견제하여 왔기에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이 향후 한반도의 발전에 끼칠 영향이 주목된다. 특히 중국에서는 오는 10월 개최가 예상되는 제18차 당대회에서 지도부 교체가 예정되어있다. 향후 한반도정세가 중국 신지도부의 새로운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한 평가와 대응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남북한관계와 한반도 주변 정세 변화의 분석함에 있어서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한반도정세의 변화와 중국국내정세의 변화에 따라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결정과정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의 외교정책에 결정과정과 대한반도정책에 관한 연구도 그 어느 때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¹⁾ 이러한 연구 성과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결정에 대한 이해와 대한반도 정책 분석에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연구는 서술적인 방식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역동성에 대한 체계적, 분석적 시각은 제공할 수 없는 한계성이 보인다. 그리고 중국과 북한과의 많은 문제들은 민감한 정치사안으로서 대외적으로 공개된 정책만을 분석할 수밖에 없는 중국의 현실에 구속된다는 점 또한 본격적인 연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²⁾ 따라서 이 영역 연구에서의 더욱 구체화된 분석과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이런 시점에서 본 연구는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기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의 특징을 정리하면서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결정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결정의 이론적 접근

1) 서진영, 《21세기 중국외교정책》(서울:폴리테이아, 2007) 제3장; 서진영, <개혁개방시대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 제도적 맥락>, 《동아시아연구》 6권 (2003); 김홍규, 《중국의 정책결정과 중앙-지방관계》(서울: 폴리테이아, 2007); 김홍규, <중국 외교정책 결정과정: 대 한반도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이해를 위한 초보적 분석>, 《新亞細亞》15권 3호(2008년 가을); 張歷歷, 《外交決策》(北京:世界知識出版社, 2007) 등이 있다.

2) 이정태, 《국내변수로 본 중국대외정책 결정요인》(서울: 대왕사, 2005), 5쪽.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 국가가 실행하는 대외정책을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며, 대외정책을 연구할 때 적절한 수준과 단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여왔으며 다양한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접근법들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³⁾ 즉, ‘단일수준 분석법(single-level analysis)’과 ‘복합수준의 접근법(multi-level analysis)’이다.

단일수준 접근법으로서 현실주의를 옹호하는 학자들은 국가의 대외정책을 국제체력간의 상호행위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결정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국제체제에서 생존해 나가는 것이 국가 대외정책의 최우선 순위라고 규정한다. 한편으로 대외정책에서의 국내정치적 영향을 강조하는 상호의존 이론가들의 경향이다. 상호의존이론가들은 국제정치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복합적인 경로와 행위자들 그리고 비군사적 수단 및 국제사회를 더욱 복잡하고 상호의존적으로 만드는 경제변수들의 역할에 관해 연구한다. 사회심리학자 또는 정치심리학자들은 개인수준의 정책결정자의 성격·인품·신념체계·성장과정 등이 대외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복합수준의 접근법은 한 국가의 대외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국가를 둘러싼 국제체제와 국내문제를 동시에 바라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로즈노우는 국내와 국제체제 간의 상호의존적이고 중복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연계모델을 제시하였다. 로즈노우는 연계라는 개념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국내시스템의 어떤 국면이 어떤 국제체제와 연계되는가를 규명하는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로즈노우의 이론은 중국의 대외정책연구에 있어서 외적 요인을 분석하는 데 상당한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연계분석법은 국제체제와 국내 제약요건들이 서로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둘 다 거시수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제-국내 연계접근 분석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은, 국내외적인 거시수준과 미시수준(개인적 차원)으로서의 정책결정자들과의 상호작용이다.⁴⁾ 이는 급격한 국내변화를 겪은 후의 장쩌민(江澤民) 시기와 후진타오(胡錦濤)

3) 자오 찬성(趙全勝), 《중국의 외교정책: 미시·거시연계접근분석》(서울: 오름, 2001), 53~56쪽.

4) 자오 찬성(趙全勝), 전계서, 55쪽.

시기의 대외정책을 설명하는 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미시-거시 연결모델로 중국의 대외정책을 분석한 자오 찬성의 연구는 사회현실이라는 거시구조를 상징적 및 실제적 그리고 물질적인 세 가지 범주로 나누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시구조가 미시수준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보이면서 각각의 범주를 다시 과정(process), 상황(situation), 구조(structure)로 세분화하였다.⁵⁾ 자오 찬성은 기존의 이론을 적용하여 ‘미시-거시 연계모델’로 중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분석을 한층 발전시켰다. 그는 중국 외교정책의 행위 양식을 분석하기 위해 ‘미시-거시 연계접근 분석’이라는 사회과학 이론을 활용했다. 거시구조로써 자오 찬성은 상징적, 제도적, 그리고 권력·정권이라는 세 가지 범주를 제시하였으며, 그리고 그 각각의 거시구조는 서로 상용하는 일단의 개인적 및 집단적인 결정과정을 가지고 있다. 그는 중국 외교정책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제환경, 국내제약, 또한 정책결정자 개인과 같은 주요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면서 중국 외교정책의 진행상황 및 그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법을 토대로 탈 냉전기의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분석된다. 첫째, 구소련의 몰락과 함께 국제질서는 세계화라는 추세하에 과거와 달리 평화와 경제발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세계적 차원에서의 긴장완화와 화해, 협력 추세에 영향을 받아 탈냉전적 양자관계의 조정, 다자간 경제·안보 협력론의 등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⁶⁾ 특히 21세기 들어와서 국제사회에서는 새로운 행위기준으로 경제적 국가이익과 실용주의가 부상했다. 중국은 평화와 발전이 국제사회의 양대 주제가 되고 있으며 일극체제는 다극체제로 이동할 것이며⁷⁾ 다극화 추세가 전 세계뿐만 아니

5) Bernhard Giesen, <Beyond Reductionism: Four Models Relating Micro and Macro Levels> in Jeffrey Alexander et al., <The Micro-Macro Link>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7), 348~349쪽.

6) 정종욱, <동북아 질서와 중·일의 역할> (서울: 국제문제연구소, 1992), 20쪽.

7) 중국전문가들의 이러한 판단에 관한 논문은 Yu Qifen, <The International Security Situation in the 1990>, <China Military Science> (Spring 1995); Gao Heng, <Future Military Trends>, <World Economics and Politics> 2(1995)에서 논술되고 있다.

라 지역내에서 정치영역뿐만 아니라 경제영역에서도 가속하여 발전하고 있다”⁸⁾라고 판단한다. 이와 동시 중국은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냉전체제의 잔존은 동북아시아지역의 대립과 갈등 등 불안한 요인을 일으키고 있으며 미국의 패권정책이 강화되는 등 불확실성 요인이 증대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로서 중국은 미 패권주의를 억제하기 위해 전방위 외교를 추진하였으며 역대 주변국가들과 협력관계를 강화하였다. 이는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의 전환과정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중국은 1992년 한국과 수교하였으며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을 남북한 등거리외교로 전환하였다.

둘째, 중국의 국가발전전략과 국내정치의 변화는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을 포함한 대외정책 결정에 있어 커다란 비중을 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의 국제정치란 국내정치를 논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며 양자는 상호 필요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대외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른 분야의 정책들과는 달리, 정책대상이 되는 대외환경은 물론, 그러한 대외정책을 결정해내는 국내환경까지도 포함해야하기 때문이다.⁹⁾

또한 1990년대 들어서 한반도정세의 변화와 중국국내정세의 변화에 따라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결정기구 및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결정과정에서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은 중국 지도체제 개편과 성경변화에 따라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왔다. 따라서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연구에서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결정과정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대한반도정책 결정요인 등이 어떠한 기구 속에서 이루어지고 이러한 제 요인들이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결정과정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III.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

1.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 기구

8) 江澤民,《論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北京:中央文獻出版社, 2002), 513~523쪽.

9) 최종기,《현대국제관계이론》(서울: 박영사, 1994), 396~397쪽.

1) 당 차원으로서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중국공산당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주요한 대내외정책의 최고 정책결정기관이다. 정치국 상무위원은 당·정의 주요직위를 겸직하고 있으며 이들은 당서기처 및 국무원 등에서의 기타 여러 중요 직위들을 이용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앙정치국상무위원회는 중앙위원회 폐회기간중 중앙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며 국가와 당에 관계되는 모든 정책을 최종 결정한다.

(2) 중공중앙 외사공작영도소조는 서기처 산하의 조직이다. 중공중앙 외사공작영도소조회의는 총서기가 소집, 주재하며, 사안과 관련되는 당·정고위간부가 참석한다. 외교문제에 관련되는 모든 조직이 이 소조에 참여하고 있으며 소조의 구성원은 사실상 중국공산당 최고의 정책결정권자 외, 외교업무를 담당한 실무책임자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중공중앙 외사공작영도소조는 중대한 사안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의 의견을 종합하고 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구이다. 소조는 단순히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공산당의 고위급 영도자가 소조에 이미 결정된 정책을 통보하거나, 관련회의에 참가할 구성원으로 통지하거나, 방침을 하달할 뿐만 아니라 중앙서기처와 외교업무와 관련된 영도자들과의 대화채널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0년 9월 중국은 중공중앙 국가안전영도소조(中央國家安全領導小組)를 건립하고 이후부터는 중공중앙 외사공작영도소조와 함께 실무 처리를 한다. 중공중앙 외사공작영도소조와 중공중앙 국가안전영도소조간의 관계는 간판이 두 개지만 그 실체는 하나라고 할 수 있다(一個機構, 兩個牌子).

(3) 국무원외사판공실(國務院外事辦公室)은 중공중앙 외사공작영도소조의 실무기구(常設機構)이다. 국무원외사판공실의 당 업무는 국무원판공청 공산당위원회로부터 지도를 받는다. 국무원외사판공실은 당·정·군의 외교창의, 외사소조의 결의의 하달, 실시 및 조절 등 제반 기구를 걸치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¹⁰⁾ 국무원외사판공실 주요 기구로는 비서행정사(秘書行政司),¹¹⁾ 외사관리사(外事管理司)¹²⁾와 정책연구사

(政策研究司) 등이 있다. 그 중에서 정책연구사는 국제정세 및 외교정책의 집행에서의 중요한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수행 및 제언을 하며, 중공중앙 외사영도공작소조 전체회의 및 판공회의, 그리고 전문조정회의의 업무를 담당한다.

(4) 중공중앙 대외연락부(中共中央對外聯絡部)는 1951년에 중국공산당의 대외교류의 발전과 대외관계의 개척을 위해 설립한 기구이다. 이는 주로 중국공산당과 세계 각지의 공산당과의 대외 교류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중공중앙 대외연락부가 업무추진 시 외교부와 협의 처리한다. 기구는 판공실(辦公廳), 연구실, 8개 국(局), 예빈국(禮賓局), 간부국(幹部局), 기관당위(機關黨委), 신시편연실(信息編研室) 등이 있다. 구소련과 동유럽에서 공산당 정권이 통치하던 당시, 중국의 대외연락부는 중국국무원 외교부 이상의 외교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1990년대 이래 소련을 비롯하여 동구권 각지에서 공산당 정권이 붕괴하면서 중공

10) 구체적으로 ①국제정세, 외교정책 집행 중에서의 중대한 문제, 그리고 외사 관리업무에 대한 조사연구의 실행과 제언기능 수행 ②중공중앙 외사공작영도소조 전체회의와 판공회의의 업무 담당, 회의결정사항에 대한 집행 독촉, 외교 사무에 대한 조정기능 수행 ③중국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을 대표하여 외사 업무에 관한 전국적인 규정을 제정하고, 외사와 관련되는 중앙, 국가기관 각 부처, 각 성, 자치주(自治區), 직할시(直轄市) 등 단체의 규정 심의 ④중앙, 국가기관 각 부처와 각 성, 자치구, 직할시가 중공중앙 외사공작영도소조와 국무원에 제출한 외사관련보고 및 청구 처리 ⑤중공중앙 외사공작영도소조와 국무원의 위임한 각종 사항을 처리하는 기능 등이다. 《國務院辦公廳關於印發國務院外事辦公室職能配置內設機構和人員編制規定的通知》(1998年6月8日國辦發「1998」32號), 참조.

11) 비서행정사가 정보, 일상문서 처리 및 행정사무 관리, 그리고 인사문제와 공산당 업무를 겸임 한다.

12) 외사관리사는 중앙과 국가기관, 그리고 각 성, 자치구, 직할시가 중앙외사영도소조 및 국무원에 제출한 외사 업무 보고서 및 청구를 처리한다. 이 부처는 일부 외사관련 전국규모의 법규를 구상하며, 관련 법규수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외사관리사는 중국 공산당중앙, 국가 관련 기관 및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중요한 외사 규정을 심의하여, 중공중앙 외사공작영도소조와 국무원 대신 각 지역 각 부처에서 신청한 외사심사권에 대한 답변을 한다. 이 부처는 또한 외사관리 업무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행하며, 이에 따라 개선 의견을 제시한다. 외교관리사는 관련정책 및 규정의 집행에서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외사관리제도 및 규율을 위반한 사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제시하는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

중양 대외연락부의 가치도 떨어지게 되었다.

(5) 중공중양 군사위원회(中共中央軍事委員會)이다. 중공중양 군사위원회는 군사정책의 결정기구로서 실질적으로 통수권을 장악하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이는 1927년 창설되었으며, 현재 후진타오가 주석직을 담당하고 있다. 중공중양 군사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주석, 부주석, 위원, 비서장 등으로 구성되며¹³⁾ 국가중양군사위원회(國家中央軍事委員會)와 동일하다.

2) 정부차원에서는 국무원 아래의 각급 부서가 해당 문제에 관한 외교정책에 관여하고 있다. 일상적이고 구체적·집행적 결정은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결정되는데, 국무원 상무회의는 국무원 정책결정의 핵심체로서 총리 및 부총리를 비롯한 외교부장, 국방부장 등이 참가한다. 이 상무회의는 외교부장 및 상무부(商務部) 등 국제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정부간 관계에 관한 대부분의 중요한 정책을 합의한다.

(1) 외무분야에 정책 권고와 실행에 대한 일상적인 책임부서인 외교부는 중국의 부 가운데서도 남다르다.¹⁴⁾ 루닝(魯寧)은 외교정책결정과정에 중국의 중앙정치엘리트와 외교정책 엘리트의 성격변화에 더하여, 외교부의 변화 역시 중요하다고 기술했다. 외교부는 국무원을 구성하는 한 부서로서 상위기관에서 이미 결정된 정책을 실천하는 집행기관이며 외교부의 고위관리들은 정책의 제안뿐만 아니라 상급기관에서의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기도 한다.

(2) 상무부는 WTO가입 이후 시장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3년에 개최된 제10기 전인대 결의에 근거하여 기존의 국내시장을 담당하는 국가경제무역위원회(國家經濟貿易委員會)와 대외무역을 담당하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對外貿易經濟合作部)를 통폐합하여 창립된 기구이다.¹⁵⁾ 이는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중국 경제와 세계경제의

13) http://news.xinhuanet.com/ziliao/2002-01/25/content_254208.htm.

14) Lampton, David M., <China's Foreign and National Security Policy-Making Process: Is It Changing and Does It Matter?>, David M. Lampton, ed., <The Making of Chinese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n the Era of Reform, 1978~2000>(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 6쪽.

15) http://news.xinhuanet.com/zhengfu/2003-07/25/content_993675.htm.

통합성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

3) 군기구로서 국가중앙군사위원회(國家中央軍事委員會)¹⁶⁾는 앞에 언급한바와 같이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와는 사실상 하나의 기구이다. 1983년 2월 중국은 국가발전 추세에 따라 당의 군대라는 의식을 배제라고 국가와 국민의 군대라는 인식전환을 위해 국가중앙군사위를 창설하였으나 즉 중국헌법에 따르면 국가중앙군사위가 전국의 무장력을 지도한다고 규정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중공중앙 군사위 성원이 국가중앙군사위를 겸직하는 방법을 통해 당이 중국의 정규무장력인 인민해방군을 장악하고 있다. 당의 군에 대한 지도성은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통수, 군 정면에 대한 지도, 군내 정치위원회 실시, 당 조직에 의한 국내장병동향 파악이라는 형태로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4) 중국 외교정책결정에서 당과 정부산하 연구기관, 그리고 대학관계 연구기관에서도 정책관련문제의 연구를 확대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정력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이 직접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일이 많아졌다.¹⁷⁾이 연구기관들은 정부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문 또는 자료를 제공하며, 건의서도 제출하기도 한다. 상기 연구기관에 몸 두고 있는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 외교 등 제반 영역의 정책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이제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참여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접근을 택하고 있다. 전체적인 경향을 볼 때 보다 잘 조직되고 효과적인 대외 관계조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국무원 부서에는 또한 신화통신사(新華社)가 있다. 신화통신사는 전국 각지 언론사들에게 뉴스를 제공한다. 외교부가 대외발표시 신화사에 보도문을 단독 제공하거나, 신화사에 먼저 통보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대외에 공포한다.

16) 국가중앙군사위원회는 중공중앙 군사위위구성과 동일하며 총참모부(總參謀部), 총정치부(總政治部), 총후근부(總後勤部), 총장비부(總裝備部), 그리고 군부와 관련된 연구기구인 중국군사과학원(中國軍事科學院)과 국방대학(國防大學)등으로 구성된다.

17) 張歷歷, 《外交決策》(北京: 世界知識出版社, 2007), 205쪽.

2.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 과정

중국은 당·정·군체제로서 중국공산당은 최고의 권위와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주체이다. 중국의 모든 정책은 공산당을 중심으로 결정되고 정책기관들은 당의 지배를 받는다. 중앙정치국은 외교정책을 포함한 국가정책의 사실상 최고 결정기관으로서 외교정책 결정에 있어서 가장 권위적인 권력을 가진다.¹⁸⁾ 정치국 상무위원은 당·정의 주요직위를 겸직하고 있으며 이들은 당서기처 및 국무원 등에서의 기타 여러 중요 직위들을 이용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대외교 사안의 결정에 참여하는 국무원의 고위간부들이 당의 요직을 겸하고 있고, 중대사안일수록 당정간 협의에서 결정되므로, 외교문제에 대한 당의 역할도 크다. 그러나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모두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인 외교정책의 결정과 집행은 최고지도자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중 외사업무계통을 담당하는 일부 위원의 지휘를 받아 당과 국가, 그리고 군부의 관련 기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외교정책 결정체제는 주로 사안의 중요성, 관련성에 따라 필요시 관련기관과 협의를 갖게 된다.

중공중앙 외사공작영도소조는 외교업무에 대한 의견교환 및 토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중앙정치국과 상무위원회의 영도를 받는다. 소조의 구성원은 주요한 외교정책 문제에 대한 중앙지도부의 견해를 구체적인 정책형태로 실무부서에 전달되고, 실무부서들의 상호 조정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최고 지도자에게 전달된다. 일상적이고 구체적·집행적 결정은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결정되는데, 국무원 상무회의는 국무원 정책결정의 핵심체로서 총리 및 부총리를 비롯한 외교부장, 국방부장 등이 참가한다. 이 상무회의는 외교부장 및 상무부 등 국제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정부간 관계에 관한 대부분의 중요한 정책을 합의한다. 외교부는 일상적인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국무원 대외관계 주무부서로서 국무원 및 당서기처 등 부처에 정책을 총리에게 보고 또는 건의한

18) Lu Ning, 《The Dynamics of Foreign-Policy Decision Making in China》(Boulder: Westview Press, 1997), 1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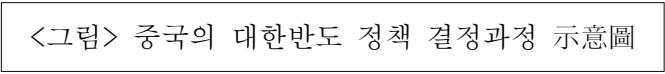
다. 특정국가에 대한 업무는 지역 업무를 담당하는 부부장, 해당 국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관장하는 사장(司長), 그리고 해당국가 업무를 담당하는 처(處)에 의해서 보고되면, 외교부장이 최종 결정하거나 또는 총리에게 상신함으로써 업무가 수행된다.

요컨대, 외교부는 국무원 기타 부처, 중공중앙 대외연락부등과 협의하고, 국무원 총리는 국무원 부장급 이상의 관련간부들을 소집, 협의하며, 사안에 따라 결정이 어려운 사안은 국가주석에 상신하거나, 국가주석에게 중공중앙 외사공작영도소조회의 또는 당 정치국회의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소집하여 협의하며 최종 결정을 내린다.

IV. 대한반도정책 결정과정 및 특징

1. 과정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결정과정은 정치지도자, 정부관료, 그리고 전문가집단의 의견의 교합과정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실무를 책임지는 주체는 외교부 아주사(亞洲司)이다.¹⁹⁾ 양제츠(楊潔篪)가 외교부부장직을 담당하고 있으며 외교부 산

19) 아주사의 주요 기능으로는 아주지역과 국가의 정세 파악, 해당 지역 및 국

하의 아주사는 뤼조휘(羅照輝)사장의 4명 부사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이슈가 제기되면, 실무부서를 중심으로 관련부처와의 내부 토의를 걸친 후 정책대안을 작성한다.²⁰⁾ 그리고 그 대안을 중공중앙 외사영도소조에 제출하여,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정책결정과 조율을 한다. 예를 들면 한국과의 국교정상화와 같은 중요한 외사문제는 당연히 외사영도공작소조에서의 폭넓은 검토와 협의를 걸치며,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공식 또는 비공식 토론을 진행하여 최종적인 결의와 집행을 수행한다.²¹⁾ 중공중앙 외사공작영도소조회의는 당 총서기가 소집, 주재하며, 사안과 관련되는 당·정고위간부가 참석한다. 외교문제에 관련되는 모든 조직이 이 소조에 참여하고 있으며 소조의 구성원은 사실상 중국공산당 최고의 정책결정권자 외, 외교업무를 담당할 실무책임자들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주석, 당총서기, 국무원총리, 외교업무책임자 지닌 국무원 부총리, 외교부부장, 중공중앙 대외연락부부장과 상무부부장, 그리고 중공중앙 군사위원회의 실무부서 책임자들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중공중앙 외사공작영도소조회의는 총서기가 소집, 주재하며, 사안과 관련되는 당·정고위간부가 참석한다. 외교문제에 관련되는 모든 조직이 이 소조에 참여하고 있으며 소조의 구성원은 사실상 중국공산당 최고의 정책결정권자 외, 외교업무를 담당할 실무책임자들로 구성된다.

중국과 한국의 일반적인 외교문제는 외교부 아주사 산하의 한국 담당 실무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외에 한중 양국간의 경제관계

가와 관련 실무 처리, 해당 지역과 국가와의 쌍무관계에서 구체적 정책조정, 해당지역 주재 중국 대사관 외교업무 지도 등이다.

<http://www.fmprc.gov.cn/chn/pds/wjb/zzjg/yzs/>.

20) 외교부의 조직체계에 대해서는 中華人民共和國 外交部 政策研究室 編, 《中國外交: 1998年版》(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998), 918~919쪽; 그리고 대외무역경제합작사를 비롯한 국무원 행정부서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서 國務院辦公廳秘書局中央機構編制委員會辦公室綜合司編, 《中央政府 組織機構: 1998》(北京: 改革出版社, 1998) 참조.

21) 서진영, <새로운 동북아 국제질서와 중국: 강택민시대 중국의 대외정책과 한반도문제를 중심으로>.

http://www.eastasianstudies.org/bbs/zboard.php?id=treatis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8.

문제는 상무부가 책임지고 있다. 첸덕명(陳德明)가 현 상무부 부장이고 그 산하인 아주사는 첸저우(陳洲)사장의 4명 주요담당자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과 북한관계 처리는 외교부와 군 외에 중공중앙 대외연락부도 대북관계를 담당하고 있다. 대외연락부 중 2국(二局)인 아주국(亞洲局)은 동북아시아 국가의 정당·정치조직과의 교류 및 연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00명 정도로 구성된 이 당 기관이 독자적인 임무와 정보를 토대로 북한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기구는 외교부 및 군과 더불어 중국의 대북한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 조선노동당은 오랜 기간 중국 공산당의 우당(友黨)이며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공중앙 대외연락부의 중요한 업무였다. 북핵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은 2010년 2월 방북한 가운데 공동발전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당차원’에서의 협력 강화에 협의한 바 있다²²⁾. 그러나 대외연락부는 현재 정당외교 업무분야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그 지위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5년 2월 북한이 ‘핵 보유 선언’을 한 직후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기 위해 중국이 북한에 파견한 인물은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이었다. 당초 왕자루이의 평양 방문은 후진타오의 방북 준비를 위해 마련됐다. 북한과 협상하는 창구는 주로 대외연락부이며, 외교부는 대외연락부에 부탁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핵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이며 대외연락부 혼자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상세한 발언 요령을 읽거나 하는 정도는 외교부 고위 관리에게 맡기는 경우도 많게 되었다.²³⁾ 이는 북한미사일 사태,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외교에서 외교부가 오히려 주로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에서도 알 수 있다. 2003년 초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과만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중국은 천치천(전 외교부장) 부총리를 단장으로 외교부의 왕이(王毅)부부장과 푸잉(傅瑩)아주국 국장을 당시 김정일이

22) 윤현정, <북-중 정상회담과 중국의 선택>, 『정세와 정책』 6(2010), 6쪽.

23) 후나바시 요이치(오영환 외, 옮김), 《김정일 최후의 도박》(서울: 중앙일보사 미디어, 2007), 420쪽.

묵고 있었던 북한 삼지연에 파견하여 북한 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 협의에 북한의 참가를 요구하러 방북했다.²⁴⁾ 2006년 10월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한 후 중국국무위원 탕자쉬안은 후진타오주석의 특사로서 당일에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후주석의 서신과 구두편지를 전달하여, 북한의 재차 핵실험을 포기하도록 설득하였다. 탕자쉬안의 이번 평양방문은 핵실험 후, 중국 국가요원의 첫 번째 북한방문이며, 이번 방문은 다이빙궈외교부 부부장, 추이텐카이(崔天凱)외교부부장 보좌관 등 외교부 고위층관료들의 동행하에 이루어졌다.²⁵⁾

외교부는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책을 입안하고 검토하며 전문적으로 북핵문제와 관련된 응급기구가 설치되고 있다. 이 기구의 조정소조는 주로 아주사, 국제사(國際司), 군공사(軍控司), 구아사(歐亞司), 신문사(新聞司)등이 주관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교부 조선반도사무관공실(朝鮮半島事務辦公室)은 북한핵문제와 관련된 사무를 직접적으로 처리한다.²⁶⁾ 구체적인 결정과정을 보면, 관련과에서 문서를 작성하여 외교부에 보고한다. 국가주석은 중공중앙 외사공작영도소조 회의를 소집하여 외교부에서 제안한 사안을 토의, 결정을 내리거나, 당 정치국내에서의 협의를 통한 건의로 결정을 내린다.

그 과정에서 외교부, 당과 국무원 산하의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의 견해도 북한 핵문제와 같은 한반도문제의 처리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기관은 중국 외교정책 결정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으며, 중국의 외교정책 연구에서 이들의 목소리는 날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 연구기관들은 정부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문 또는 자료를 제공하며, 건의서도 제출하기도 한다. 이러한 연구기관으로서는 1956년에 국제·경제정세를 연구하기 위해 성립된 중국국제문제연구소(中國國際問題研究所, 외교부 소속), 1977년에 사회과학연구 및 정책건의의 목적으로 설립된 중국사회과학원(中國社會科學院, 국무원 소속) 및 1980년에 설립된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中國現代國際關係研究院, 국가안전

24) 후나바시 요이치(오영환 외, 옮김), 전게서, 381쪽.

25) 《環球時報》, 2006年 10月 20日.

26) “中國沈着應對朝核危機,” <http://sym2005.cass.cn/file/2006101481745.html>.

부 소속), 1979년에 국제전략 및 안보문제에 대한 연구 위주로 한 중국 국제전략학회(中國國際戰略學會, 국방부 소속)등이 있다. 상기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집단은 정책현안에 관한 자료수집 및 분석을 통해 소속 관료기구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대 한반도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 외에 또한 국방대학(國防大學)과 군사과학원(軍事科學院)있다. 이들은 중공중앙군사위원회에 소속한다. 앞에 언급한바와 같이 중국의 군대편성특징은 군대와 중국공산당 간의 밀접한 관계에 있다. 중국의 인민해방군(人民解放軍)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이 통솔한다. 이 기구는 전국 병력을 지휘하고 주석책임제를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무장역량에 대한 명령은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혹은 중앙군사위원회의 명의로 통일되며, 국무원과 연합하여 명령을 내릴 때는 중앙군사위원회의 명의를 사용한다. 현재 국가중앙군사위원회주석은 후진타오, 부주석은 시진핑(習近平), 귀보슝(郭伯雄), 쉬차이허우(徐才厚) 등 이다.

2. 특징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결정과정은 다각도, 다차원에 입각하여 이뤄지고 있으며, 다양한 색깔과 이익을 반영하고 있다.

덩샤오핑 시기 중국의 정책 결정체제의 특징은 일부 엘리트집단의 과두정치라고 설명된다.²⁷⁾ 그러나 최근 들어서 중국이 외교정책결정에서 새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²⁸⁾ 하나는 여전히 적은 수이긴 하지만 행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며 하나는 개인, 단체와 지방정부들이 공식적으로 외교안보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적으로 보다 많은 활동 공간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개혁개방의 심화와 더불어 대외문제의 성격이 날로 전문화·다양화되는 가운데 중

27) 김홍규, <중국의 정책 결정과 민주집중제>, 《국제정치논총》 44:1(2004), 432쪽.

28) David M. Lampton, ed., 《The Making of Chinese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n the Era of Reform, 1978-2000》(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 2쪽.

양정부 관료체제도 광범위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다.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결정과정이 과거보다 개방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정책결정에 있어서 개인화된 결정은 감소되었다는 것이며 다음, 리더십이 더 교육받고 국제적이 되어, 결정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보다 넓게 찾는 경향이 있다. 또한, 관료제가 보다 분화됨에 따라 전문화된 정책결정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경제적 목표가 중국 정책의 제일 중요한 것이 되었고 다자적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⁹⁾

대체로 1980년대에는 대부분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이 관료집단들은 북한에서 근무했거나 유학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적인 관점에서 한반도 문제를 접근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탈냉전시대의 한반도 전문가집단이 관료집단은 중국의 국가이익이라는 차원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³⁰⁾에 대해 재인식하고, 한반도문제에 대한 ‘실용주의 정책합의’가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책결정자의 변화는 결국 북중 양국간 정치엘리트간의 유대관계의 약화를 보여주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결정과정에서 적지 않게 작용되었다. 즉 대한반도 정책결정에서 보다 실용적인 방향으로 편향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결국 대한반도정책을 중국의 경제발전과 지역역할 발휘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할 것이라는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장쩌민시대에 한국과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북한보다 한국을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³¹⁾ 특히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

29) David M. Lampton, ed., 전게서, 27~29쪽.

30) Samuel S. Kim, <The Making of China's Korea Policy in the Era of Reform>, David M. Lampton, ed., 《The Making of Chinese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n the Era of Reform, 1978-2000》(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 405쪽.

31) 지난 9월 30일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과 겔럽이 실시한 ‘중·일 공동여론조사’에 따르면, 중국인이 주변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후진타오는 한국은 68%이고, 북한은 50%라고 보도하였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후진타오는 4년 전의 같은 조사보다 24%가 증가했다고 한다. 이런 조사를 통해서 한국과의 교류협력이 증대되면서 점차로 북한보다 한국을 선호하는 중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요미우리 신문의 조사결과에 대한 간

전을 강조하는 개혁과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북한의 폐쇄적이고 전투적인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하고, 북한 체제의 생존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경향도 대두하였다.³²⁾ 북한에 대한 경제적 관계를 긴밀히 하여 개혁개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국의 중요한 관심사이고 이를 바탕으로 대북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 궁극적으로 핵 포기까지 가게 한다는 것이 중국의 대북정책의 의 큰 열쇠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은 북한에게 지속적으로 체제개혁과 개방을 권유해왔다.³³⁾

한마디로 장쩌민 후기부터 오늘날 후진타오 시기 중국은 경제발전을 최고 국가발전목표로 정하고 보다 실용적이고 자국 이익중심적인 방향으로 편향하고 있다. 즉 경제발전이 진척됨에 따라 탈이념적 성향과 개혁이념을 강화함으로써 이념보다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국내정치의 변화는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결정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은 기존의 정치, 군사적 역할보다 사회경제적 역할의 비중을 보다 중요시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유의할만한 점은 중국과 한국과의 경제협력과 교역관계가 비약적으로 증가되면서 한반도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상무부의 역할이 크게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상무부의 형성은 국내외 유통과 시장을 통합 운영 관리할 수 있게끔 했다는 것이며 앞으로는 이 기구가 외교부와 더불어 중국의 외교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되는 행정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의 대한반도정책노선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구체적으로는, 북한과의 관

략한 보도는 《중앙일보》, 1999년 10월 1일자 참조.

32) 사실 지난 수년간 북한에 대한 인식에 따라 '북한 부담론'이 형성되어 왔다. You Ji, <Understanding China's North Korea Policy>, 《China Brief》 4:5, (2004), 387~389쪽.; 북한 부담론은 북한 경제의 개혁이나 회생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불가능할 것이어서 북한의 체제 붕괴는 필연적이라고 판단한다. 더구나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되어 가는 상황에서 보다 강한 압박 혹은 미국과의 '신중한' 협력을 통해 붕괴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王忠文, <以新視 覺審視朝鮮問題與東北亞形勢>, 《戰略與管理》(2004), 92~95쪽.

33) 김홍규, <핵실험 이후 북중관계>, 《한반도 포커스》2(경남대학교 극동문제 연구소, 2009), 17쪽.

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확대함으로써 한반도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V. 결 론

국제정세와 중국 국내정치변화에 따라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결정과정도 개인에 집중되었던 상태에서 벗어나 다각도, 다차원에 입각하여 이뤄지고 있으며 다양한 색깔과 이익을 반영하고 있는 의견의 교섭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자 중국은 한편으로 경제발전과 경제구조의 조정 에 따라 사회계층구조가 급격히 변화해갔고,³⁴⁾ 다른 한편으로 시장화 개혁과 대외개방의 확대에 따라 중국사회는 점차 다원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익의 다원화, 사상의 다원화 추세를 띠고 있다.³⁵⁾ 중국공산당은 계급의 이익과 함께 전체 인민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전민성(全民性)’을 명문화 하였다. 중국공산당의 이러한 변화는 그들이 이데올로기적 한계를 극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로 중국공산당은 대외정책에서 더욱 자유롭게 실용주의 노선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지도자 인원구성으로 볼 때, 중국정치의 정상화·제도화·합리화가 진행되면서 전반적으로 테크노크라트들을 중심으로 하는 ‘신권위주의 정권’의 성격으로 전환되었다.³⁶⁾ 이들은 경제와 기술발전을 더욱 중시하며, 서구 선진국가와의 상호의존을 강조하여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을 더욱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개방이념은 경제영역뿐만 아니라 정치영역에서도 강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중앙위원과 정치국위원 중에서 대학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비

34) 江澤民, 《江澤民在慶祝建黨八十周年大會上的講話》『人民日報』, 2001年 7月 2日; 陸學藝, 《當代中國社會階層研究報告》(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2), 4~43쪽.

35) 段思霖, <中國社會階層大分化>《廣角鏡》(2002), 12~17쪽.

36) 박두복,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신추세와 한·중관계 발전방향》(서울: 외교안보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2000), 7~9쪽.

율이 대단히 높아졌다. 중국 지도부는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한 당 정치국 상무위원 대부분이 이념보다 실용주의를 중시하는 성향이 강한 기술관료 출신이라는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중국 내에서 북한과의 정서적 유대, 동지애, 전우애를 공유하고 있는 노세대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과 함께 북한 내에서도 노세대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이러한 중국엘리트 성격의 극적 변화와 북한 지도층간의 관계의 소원으로 인해 중국과 북한간의 혁명유대관계가 약화되었다. 중국 지도체제는 대한반도정책 결정과정에서 더 이상 이데올로기 요인만 국한하지 않고 실리위주의 외교로 전환하였다. 중국지도부의 대북한 인식은 과거와 상당한 차이성을 보이게 되었다. 중국 지도부는 경제우선주의를 목표로 경제발전을 위해 국내의 정치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고 대외관계에서는 경제발전에 유리한 주변환경을 마련하는데 기초를 두고 있다. 이는 대한반도 정책결정에서 보다 실용적인 방향으로 될 것을 의미한다.

동북아 지역에서 연대 강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후진타오 정부는 중국 대외정책의 핵심적 가치를 ‘책임 대국’ 이미지 창출에 두고 있다. 특히 동북아지역에서 중국의 역할 발휘는 중국 대외정책의 우선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의 연대 강화는 후진타오 정부에게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중국의 대한국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경제적 상호협력 증진 및 동아시아에서의 협력 강화에 공동이익을 두고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 발전에 노력한다. 중국은 앞으로 자국 국익을 중심으로 한반도 정책에서 등거리 외교를 확대 추진할 것이다. 중국은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할 것이며, 국익을 토대로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남북한 협상과정에서 북한 편이 아닌, 보다 객관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參考文獻>

- 김홍규, <중국 외교정책 결정과정:대 한반도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이해를 위한 초보적 분석>, 《新亞細亞》15권 3호 (2008년 가을)
 ----, 《중국의 정책결정과 중앙-지방관계》(서울: 폴리테이아, 2007)
 ----, <중국의 정책 결정과 민주집중제>, 《국제정치논총》44:1

(2004)

----, <핵실험 이후 북중관계>, 《한반도 포커스》2(경남대학교 극동문제 연구소, 2009)

박두복,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신추세와 한·중관계 발전방향》(서울: 외교안보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2000)

서진영, 《21세기 중국외교정책》(서울: 폴리테이아, 2007).

----, <개혁개방시대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 제도적 맥락>, 《동아시아연구》6권 (2003).

----, 《동아시아연구》(고려대학교 BK21 동아시아교육연구단, 2003년 5월).

이정태, 《국내변수로 본 중국대외정책 결정요인》(서울: 대왕사, 2005).

윤현정, <북-중 정상회담과 중국의 선택>, 《정세와 정책》6(2010)

자오 찬성(趙全勝), 《중국의 외교정책: 미시·거시연계접근분석》(서울: 오름, 2001).

정종욱, 《동북아 질서와 중·일의 역할》(서울: 국제문제연구소, 1992)

최종기, 《현대국제관계이론》(서울: 박영사, 1994)

후나바시 요이치(오영환 외, 옮김), 《김정일 최후의 도박》(서울: 중앙일보사사미디어, 2007)

段思霖, <中國社會階層大分化>《廣角鏡》(2002)

江澤民, 《論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北京: 中央文獻出版社, 2002)

《國務院辦公廳關於印發國務院外事辦公室職能配置內設機構和人員編制規定的通知》(1998年6月8日 國辦發「1998」32號)

----, 《江澤民在慶祝建黨八十周年大會上的講話》《人民日報》2001.7.2

陸學藝, 《當代中國社會階層研究報告》(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2)

王忠文, <以新視覺審視朝鮮問題與東北亞形勢>, 《戰略與管理》(2004)

張歷歷, 《外交決策》(北京: 世界知識出版社, 2007)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政策研究室 編, 《中國外交: 1998年版》(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998)

國務院辦公廳秘書局中央機構編制委員會辦公室綜合司編, 《中央政府組織機構: 1998》(北京: 改革出版社, 1998)

Bernhard Giesen, <Beyond Reductionism: Four Models Relating

- Micro and Macro Levels>, in Jeffrey Alexander et al.,《The Micro-Macro Link》(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7)
- David M. Lampton, ed.,《The Making of Chinese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n the Era of Reform, 1978-2000》(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
- Gao Heng, <Future Military Trends>,《World Economics and Politics》2(1995)
- James N. Rosenau,<Toward the Study of National-International Linkages>, in J. Rosenau ed., 《Linkage Politics: National and International System》(New York: The Free Press, 1967)
- Lampton, David M.,<China's Foreign and National Security Policy-Making Process: Is It Changing and Does It Matter?>>David M. Lampton, ed.,《The Making of Chinese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n the Era of Reform, 1978-2000》(Stanford:Stanford University Press,2001)
- Lu Ning, 《The Dynamics of Foreign-Policy Decision Making in China》(Boulder: Westview Press, 1997)
- Samuel S. Kim, <The Making of China's Korea Policy in the Era of Reform>,David M. Lampton, ed.,《The Making of Chinese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n the Era of Reform, 1978-2000》(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
- You Ji, <Understanding China's North Korea Policy>, 《China Brief》4:5(2004)
- Yu Qifen, <The International Security Situation in the 1990>, 《China Military Science》(Spring 1995)
- http://news.xinhuanet.com/ziliao/2002-01/25/content_254208.htm.
- <http://www.fmprc.gov.cn/chn/wjb/zzjg/default.htm>.
- <http://www.fmprc.gov.cn/chn/wjb/zzjg/yzs/default.htm>.
- http://news.xinhuanet.com/zhengfu/2003-07/25/content_993675.htm.
- 서진영, <새로운 동북아 국제질서와 중국: 강택민시대 중국의 대외정책과

한반도문제를 중심으로> <http://www.eastasianstudies.org>.
“中國沈着應對朝核危機,”
<http://sym2005.cass.cn/file/2006101481745.html>.
《環球時報》, 2006年10月20日.

<국문 요약>

한반도정세의 변화와 중국국내정세의 변화에 따라 중국이 대한반도정책 결정과정에서 새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결정과정은 다각도, 다차원에 입각하여 이뤄지고 있으며 다양한 색깔과 이익을 반영하고 있다.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지역역할 발휘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반도 정책결정에서 보다 실용적인 방향으로 편향하게 될 것이다.

주제어 : 한반도정세 중국 대한반도정책 결정과정 지역역할

<中文提要>

随着朝鲜半岛局势与中国国内政治的变化, 中国对朝鲜半岛的外交决策过程也出现了新的变化。中国对朝鲜半岛国家的外交决策过程在多角度和多层次化的发展过程中, 多元的利益得到表达。为促进经济持续发展、充分发挥地域影响力, 中国对朝鲜半岛的政策决策过程将更加向‘实用主义’倾斜。

关键词 : 朝鲜半岛局势 中国 朝鲜半岛政策 决策过程 地域影响力

| |
|--|
| 투 고 일 : 2012.2.26 심 사 일 : 2012.3.10~4.15 게재확정일 : 2012.4.20 |
|--|